

14.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30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 10월 17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민과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소득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4조)
- 교육지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교육지원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2조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교육지원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교육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대구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복지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서민 자녀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54억원을 투입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 26,000여명을 대상으로 도서구입 및 학원수강 등 교육경비로 연간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전년도에 비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대소득구간과 최소소득구간의 사교육비 차이가 5.1배에 달해 가구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출처: 교육부, 통계청〉

- 이를 통해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증가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학력향상과 교육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대구시에서 추진계획 중인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연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원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등학생(26,000명 정도)에 대해 지원할 경우 서민 자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엄선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음.
-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음과 동시에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 선심성 행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매년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끝으로, 바우처카드의 경우 목적외 사용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지원대상과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카드사용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 점검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사업지원 대상에 대안학교학생, 학교밖 청소년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지원대상에 초등학생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사업지원 대상에 대안학교학생, 학교밖 청소년 모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청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 공백을 메운다는 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음.	
바우처카드로 지원할 경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람.		클린센터 운영을 통해 목적외 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으며, 적발 시 가맹점 선정 및 승인해제, 수혜 사업 대상자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청소년들이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적극 협의하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